

● 이기택 협회장, 대통령 국정 자문위원에 위촉

이기택 협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국정자문위원회는 국정전반에 걸친 중요 정책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이어서 이 협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됨으로써 치과계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병·의원 수입이 늘어났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의보수가 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 자문위원회에서 특히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자문을 받을 예정이어서 치과계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협회장의 활동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치과의제도 방향이 기존의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 정예로 실시키로 원칙이 정해졌다.

이같은 시행원칙은 그동안 30여년이 넘게 진행돼온 전문치의제 시행방안 결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치협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총회 결의안과 상반되며, 보건복지부의 치협안 제검토 요청과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전문치의제 실시에 큰 행보를 내딛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문치의제에 대해 총회 전날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공직지부를 제외한 지부장들이 내놓은 합의안과 공직지부안을 표결, 지부장 합의안을 전문치의제 원칙으로 설정했다.

이날 통과된 전문치의제 안은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기존의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전문치의과목은 전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시행시기는 법이 통과된 다음해의 치과대학 본과 신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수련을 시작하여 이수한 후부터 시행함을 원칙 ▲공직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퇴임시에는 '전문치과지도의' 명칭은 사용 못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부담당부회장제 정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일반 안건으로는 전문치의제 시행안 및 치의학회 시행안, 건강보험 대책을 비롯 감염성 폐기물 법령완화, 진료과목 표방금지, 치과의사법 제정 위원회 구성, 치정회 활성화, 치아의 날 전국단위 홍보 일원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반대, 북한주민 치과의료자원 방법을 연구할 위원회 구성 등 30개 안건과 치협 집행부 안건 2건 등 총 3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회관개보수 및 증축위원회 10차 회의

회관개보수 및 증축위원회(위원장 임형순)는 지난 4월 23일 치협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관증축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찰에 응한 3개 회사 모두 내정가보다 높게 제출해 옴에 따라 내정가를 12억으로 공개하고 이들 회사에게 28일까지 견적서를 새로 써내 줄 것을 요구한 뒤 다음 회의에서 선정업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